

제346회 국회(정기회)

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

---

# 업무현황

---

2016. 10. 13.



방송통신위원회

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



# 목 차

I . 일반 현황 .....	1
II. 추진 정책 .....	3
1.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및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.....	3
2. 방송통신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 .....	8
3.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.....	13
III. 주요 현안 과제 .....	17
IV. 참고 자료 .....	21



## I.

## 일반 현황

### □ 연혁

- 2008. 2. 29. 방송통신위원회 설립
- 2013. 3. 23.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
- 2014. 4. 8.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

### □ 주요 업무

- 지상파 방송 및 종편·보도 방송 채널 관련 정책
- 방송광고 정책, 편성평가 정책, 방송진흥 기획, 방송정책 기획
- 방송통신 시장 조사 및 이용자 보호, 시청자 권리 증진, 개인정보 보호 및 인터넷 윤리에 관한 사항
-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등

\*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, 정보통신망 상의 불법정보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‘방송통신심의위원회’가 수행

### □ 소관 법률

분야	법률명
방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li><li>•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(일부)</li><li>• 방송법 (일부)</li><li>• 한국교육방송공사법</li><li>• 방송문화진흥회법</li><li>•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</li><li>•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</li><li>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(일부)</li></ul>
통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전기통신사업법 (일부)</li><li>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일부)</li><li>•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(일부)</li><li>•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</li><li>• 전파법 (일부)</li></ul>

## □ 조직 및 정원

- 조직 : 1처 3국 1관 18과



- 정원 ('16.9월 현재)

총 계	정무직	일반직	경찰직	별정직
222명	5명	215명	1	1명

- 예산 및 기금 : ('15년) 2,204억 원 ⇒ ('16년) 2,273억 원 [+69억 원]

- (재원) 일반회계 556억 원, 방송통신발전기금 1,717억 원
- (기능) 인건비 167억 원, 기본경비 42억 원, 주요사업비 2,064억 원

## □ 주요 유관기관

기관명	대표자	주요기능	근거법률
한국방송공사 (KBS)	고대영	국가 기간방송으로서 국내·외 대상 방송 실시, 방송문화 보급 및 수반사업 등	방송법 제43조
한국교육방송공사 (EBS)	우종범	교육·지식·정보·문화·교양 분야의 방송 콘텐츠 제공, 교육방송 관련 연구개발 등	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
방송문화진흥회	고영주	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수행 등	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
한국방송광고진흥 공사 (KOBACO)	곽성문	방송광고 판매 대행 및 방송광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등	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
시청자미디어재단	이석우	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등	방송법 제90조의2

## II.

## 추진 정책

### 1.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 및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

#### 1. 방송의 공적 책임 및 품격 제고

##### □ 개요

- 방송의 공적 가치와 품격 제고를 위해 공영방송 재원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 광고 지원 및 공익광고 등 사회적 책임 강화, 방송평가 제도 및 재허가·재승인 제도 등 개선

##### □ 추진 실적

- (공영방송 재원 안정화)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및 향후 소요재원, 해외 수신료 제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'공영방송 재정연구회' 구성
  - 운영('16. 5월~)
- (방송의 사회적 책임 강화) 방송광고를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역량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광고제작비 지원\* 및 송출비 할인\*\* 확대

\* 광고제작비 지원: TV 47개사, 라디오 48개사

\*\* 송출비 할인 : 201개사, 총 25,623백만원 할인 ('16.8월 기준),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들이 자율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송출비 최대 70% 할인

- 공익광고 제작·방영 지원('16년 총 11편), 한·중 공동 공익광고 공동제작·교차방영('16.2월, "효" 방영) 등 추진
- 방송재난 및 재난방송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('16.6.23)

※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해 지도·점검실시,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, 자막 형태의 재난방송 등 송출, 재난방송 등 주관방송사의 역할 마련 등

- (우수프로그램 제작환경 조성) 방송대상 시상을 통해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고('16.5.), 어린이·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개선을 추진
- (방송평가 개선) 방송평가 규칙에 '방송프로그램 제작·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' 등을 평가 항목에 반영('16.1.29)하고, 동 평가 규칙을 구체화하는 방송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마련('16.8.11)
- (협찬제도의 엄격한 적용) 협찬고지 시간·횟수·금지품목 등 법령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요원 배치 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('16.4월)
- (재허가·재승인 제도 개선) 심사의 일관성과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허가·재승인 심사 기준 고시를 제정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(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, '16.6.17)
- (재허가·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) OBS 및 종편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부과

## □ 향후 계획

-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개정 및 어린이·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도 개정 : '16. 11월
- 공영방송 재정연구회 운영 및 수신료 제도개선 방안 마련 : '16. 12월
-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및 송출비 할인 추진 : ~'16. 12월

## 2. 전 국민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

### □ 개요

- 스마트 시대에 소통·지식습득·관계망 형성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활용 능력 제고

### □ 추진 실적

- (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) 미디어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·운영('16.4월~), 미디어센터발전방안 워크숍 개최('16.8월)
  - (미디어 체험·제작 활동 지원)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어린이·청소년·노인 등 계층별, 수준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시
    - 상반기 상설교육 461개 프로그램(42,581명) 및 상설체험 831회(16,798명) 실시
  - (미디어 창의인재 양성) 초·중·고·대학 등 학년별 맞춤 교육 실시
    -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미디어 수용능력 함양 ('15년 85개교 → '16년 122개교)
      - ※ '16년 교육부 자유학기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
    - 미디어 인재 조기 발굴을 위해 초·중·고 미디어거점학교\*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생 대상 학점인증 교육과정\*\* 확대
- \* 미디어거점학교 : '15년 16개교 → '16년 54개교,  
\*\* 학점인증 교육과정 : '15년 8개교 → '16년 20개교

### □ 향후 계획

- 시청자미디어 활동을 종합적으로 홍보·전시하기 위한 시청자미디어 축제 개최 : '16. 10월
-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: '16. 12월

### **3.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성 제고**

#### **□ 개요**

- 시·청각 장애인이 방송을 통해 정보 습득과 여가 선용이 가능하도록 편리한 TV 시청환경을 조성하는 등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을 적극 지원

#### **□ 추진 실적**

- **(장애인용TV 보급)** 시·청각 장애인의 TV 시청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\*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보급 추진(12,000대)

\* 지자체와 협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중심으로 장애인용TV를 보급(서울, 인천, 부산, 대구, 광주, 울산, 세종, 충북, 충남, 경남, 강원, 제주)

- TV 크기 확대(24형→28형), 전용리모컨, 음성안내 등 장애인용TV 수신기 성능을 개선

- **(시·청각 장애인용 서비스 개선)** 장애인의 방송시청 편의를 위해 수화 방송의 크기·위치 조정 등이 가능한 스마트 수화방송 시범방송\* 실시(9월~)

\* 방송·수화 영상을 정규방송채널을 통해 송출하고 댁내 수신기에서 스마트 수화방송서비스를 이용(YTN·JTBC·KT스카이라이프·SK브로드밴드)

- **(장애인방송 질적수준 제고)** 장애인단체·방송사·학계 의견수렴을 위해 '협의체' 운영(4월~)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서비스 도입방안 연구(5월~)

#### **□ 향후 계획**

- 스마트 수화방송 시범방송 확대(기존 4개사→6개사\*) : '16. 11월

\* 시범방송 추가 2개사 : KBS, CJ헬로비전

- 시·청각장애인 전용 TV 보급 지속 추진 : ~'16. 12월

- 장애인방송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: '16. 12월

## 4. 미디어 다양성 제고

### □ 개요

- 인터넷·모바일 등 미디어 이용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콘텐츠 가치 측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및 미디어다양성 증진 기반 구축

### □ 추진 실적

- (콘텐츠 가치측정 방법 개선)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하는 콘텐츠 가치 측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, 인터넷을 통한 TV시청현황(5월~12월)과 시청점유율 제도 개선방안 연구(8월~12월) 등 추진
- (미디어다양성 기반 구축) 미디어다양성 모니터링 방안과 미디어다양성 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추진 중
- (지역방송 내실화)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·중소 지상파방송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확대
  - 30개 지역·중소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지원('16. 3월~),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및 종사자 교육 운영('16. 5월~)
  - 지역민방, DMB 등 중소 방송사 소유규제 개선 관련 연구(5월~)

### □ 향후 계획

- 미디어다양성 증진 로드맵 마련 : '16. 12월
- 중소방송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: '16. 12월

## 2. 방송통신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

### 1. 방송통신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

#### □ 개요

- 방송통신 시장환경 변화 및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응하고, 지상파방송 재송신 등 분쟁의 사전적 예방·조정

#### □ 추진 실적

##### <통신시장 사후규제>

- (사후규제 패러다임 전환) 조사·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(위반 시 제재 수준은 강화)
  -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: 과징금 경감 등 유인책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('16.4월)
  - 동의의결제도 도입 : 조사·심의 중인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종결(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제심사 중)
  - 금지행위 구체화 : 설명·고지의무 강화(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·시행, 7.28), 비필수 선탑재 앱 삭제를 가능하게 하는 등 이용자이익 저해 및 불공정 행위 세분화·명확화 (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방통위 의결, '16.9.21.)
- (단말기 유통구조 개선) 단말기유통법의 성과점검(3월)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조사·제재

- (결합시장 개선) 결합시장 경쟁상황 평가, 허위·과장 광고 및 과도한 경품 제공 등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점검 및 조사를 통해 부당한 시장 지배력 전이 방지
  - 결합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연구반 구성 · 운영(4월~)
  - 유통점의 허위·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 점검 등 추진(8월)

#### < 방송시장 사후규제 및 보편적 시청권 보장 >

- (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) 중요사항 미고지 · 허위고지, 가입자 동의 없는 유료서비스 전환 등 시청자 이익 침해 행위 중점 점검
- (보편적 시청권 보장) 지상파-유료방송 간 재송신 협의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‘재송신 가이드라인’ 마련 중
  - 현행 국민관심행사 고시의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행사명과 종목 등을 구체화하도록 고시 개정 추진

#### □ 향후 계획

- 금지행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: '16. 10월
- ‘지상파 재송신 가이드라인’ 마련 : '16. 10월
- 동의의결제 도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(안) 국회제출 : '16. 11월
- 국민관심행사 고시 개정안 마련 : '16. 12월
-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조사완료 및 시정조치 : '16. 12월
- 단말기유통법 제도개선 및 위법행위 모니터링 : 연중

## 2.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

### □ 개요

- 음란물 등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방지하고, 대상별 맞춤형 교육·홍보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

### □ 추진 실적

- (민간단체 역할 강화) 포털 등 사업자 중심의 민간단체 구성을 유도하고, 학술연구·캠페인 등 시민단체·학계의 자발적 활동 지원 확대
- (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) 웹하드·P2P사업자의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점검 및 ‘사이버안심존’ 서비스 전국 확대  
※ ‘사이버안심존’ 참여학교 수(누적) : ’15년말 333개교 → ’16.8월말 466개교
- (불법스팸 대응체계 강화)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을 독자 전산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 (3개 사업자, ’16.1월)
- (교육·홍보 강화) 유아·초등학생·청소년(중·고등학생) 및 교원 등 대상별 맞춤형 인터넷윤리 교육 및 홍보·캠페인 추진(’16.8월 기준 24,201명)
  - ‘밥상머리 인터넷윤리교육’, ‘인터넷드림 창작동요제’ 및 ‘2016 교수·학습지도안 공모대회’ 신설
  - 자율적인 인터넷문화 확산을 위한 “아름다운 인터넷 세상” 캠페인 추진(6.8~6.14)  
※ 캠페인 참여인원 : ’15년 122,688명 → ’16년 134,233명

### □ 향후 계획

- ’16년도 상반기 국내 스팸 유통 현황 발표 : ’16. 9월 말
- 2016 인터넷 윤리대전 개최 : ’16. 11월
- 사이버안심존 서비스 지속적 보급 확대 : 연중

### **3.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**

#### **□ 개요**

-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,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 확대 등을 통해 통합적이고 능동적인 이용자 보호환경 조성

#### **□ 추진 실적**

- **(이용자보호 제도개선)** 해외로밍 데이터 이용시 피해예방을 위해 약관 및 광고 개선('무제한' 삭제), 출국 전·후 로밍이용 문자발송, 종량제 한도액 인하 등 개선('16.5월)
  -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에게 중요사항(할부금, 약정할인, 위약금 등)을 쉽게 안내할 수 있는 '계약서 표준 안내서' 시행('16.7월)
- **(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내실화)** 평가 대상을 알뜰폰사업자, 포털사 등으로 확대(20개→25개)하고, 결과공표를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 유도도록 평가계획 수립('16.7월)
  - ※ 기존 이동통신(3), 초고속인터넷(9), 인터넷 전화(3), 알뜰폰(5) 총 20개 사업자에서 포털사(4), 알뜰폰(1)을 추가하여 총 25개사를 평가
  - ※ 추후 모범사례를 공개해 사업자 자율 시정을 유도하고 우수 평가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부과 시 30%를 감경하는 인센티브 부여
- **(이용자보호 활동 강화)** 보이스피싱, 로밍요금 과다 등 피해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주의안내 문자발송, 방송광고, 캠페인, 온·오프라인 교육 등 전개(연중)

#### **□ 향후 계획**

- 사업자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실시 : '16. 9 ~ 10월
- 이용자보호업무 평가결과 공표 : '16. 12월
- 이용자 피해예방 문자발송, 방송광고, 교육 등 : '16. 4분기

## 4. 개인정보 보호 강화

### □ 개요

-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집중조사,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기반 강화

### □ 추진 실적

- **(개인정보 유출 사전 예방)** 개인정보 유출 및 관리 취약분야 사업자의 유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밀접형 앱 등에 대한 집중 점검
  - 점검결과, 생활밀접형 앱 및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등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·과태료 등 부과

※ 과징금 21천만원(2개사), 과태료 53천만원(49개사), 시정명령(66개사) 부과 ('16.8월 기준)

#### < 상반기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 현황 >

- ① 060 결제대행사 개인정보 유출 시정조치(1.14.) : 1개사 과징금(3천만원), 2개사 과태료(2천만원) 등
- ②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사업자(48사) 시정조치(1.14.) : 8개사 과태료(11천만원) 등
- ③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점검(48사) 및 시정조치(4.11.) : 15개사 과태료(12천만원) 등
- ④ 국민신문고 민원신고 사업자 점검(29) 및 시정조치(5.19.) : 2개사 과태료(1천만원) 등
- ⑤ 경찰통보 개인정보 유출사업자 점검(67사) 및 시정조치(5.19.) : 11개사 과태료(10천만원) 등
- ⑥ 생활밀접형 앱 점검(16사) 및 시정조치(8.11.) : 1개사 과징금(18천만원), 11개사 과태료(17천만원) 등

- **(관련 법제도 강화)** 정보통신망법('16.3.22) 및 동법 시행령('16.9.23) 개정
  - 개인정보 규정 위반 시 CEO 징계 권고,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,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조치 강화 등 신설

- **(협업체계 강화)**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 및 대응을 위해 미래부·행자부·대검찰청·경찰 등 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

#### < 협업체계 강화 현황 >

- ① 행자부 개인정보침해사고대응협의회 참여(3.30., 6.30.)
- ② 경찰통보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점검 및 시정조치(4.11., 5.19.)
- ③ 형사벌 사안 적발에 따라 대검찰청 협의 후 조사결과 이첩(5.19., 8.11.)
- ④ 미래부와 인터파크 유출사고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(7.25.)

### □ 향후 계획

- 개인정보 집적분야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: 연중

### 3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

#### 1.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

##### □ 개요

- 제작비 부족과 제작인력 해외 유출 등 어려운 방송 제작환경에 대응하여, 합리적 규제개선으로 방송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충하고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여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

##### □ 추진 실적

- (콘텐츠 제작 재원 확충) 협찬고지 규칙을 개정하여 협찬 시간·횟수 등 형식규제를 완화('16.3.16)
  - 오락·스포츠보도 프로그램의 가상광고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가상광고 활성화 지원(방송법 시행령 개정, '16.5.28)
  - 방통위, 미래부, 문체부, 행자부가 참여하는 '광고규제 개선 협의체'를 구성하여 매체별(방송, 인터넷, 옥외, 인쇄) 광고규제 개선 추진('16.4월~)
- (상생의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) 외주 제작사를 분쟁조정 대상에 추가하고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('16.1.27) 및 시행령('16.7.28) 개정
  - 7개 TV홈쇼핑사의 편성 및 제작비 관련 불공정행위 실태점검
    - \* 실태점검 과정에서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
- (FTA의 전략적 활용) 한·중, 한·베트남 공동연구반\* 운영을 통한 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 \* 중국, 베트남과 각 2차례 공동연구반 회의 개최

##### □ 향후 계획

- 매체별 광고규제 개선 방안 마련 : '16.11월
- 불공정한 외주제작 거래유형 사례 연구 및 실태조사 : ~'16.12월
- 한·중, 한·베트남 공동연구반 회의 개최 : '16년 4분기

## 2. 신규 방송·통신 서비스 시장안착 지원

### □ 개요

- 지상파 UHD 방송 및 다채널 방송 등 신규 방송서비스를 도입하여 차세대 방송 환경에 대비

### □ 추진 실적

- (지상파 UHD 방송 기반 마련)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및 1단계 수도권 지상파 UHD 신규허가 준비
  - 지상파 UHD 방송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('15.12월), 신규허가 기본계획 의결('16.5월)
- (EBS MMS 관련 법제도 정비) MMS 채널의 법적지위 및 편성 규제 등 관련 방송법령 정비 추진
  - 다채널방송 도입방안 발표('16.1.28.), 이에 따른 방송법 개정안 입법 예고('16.5월) 및 규개위 규제심사('16.9월)  
※ '16년 EBS-2TV 신규 프로그램 제작지원으로 20억원 집행, '17년 정부예산안에 50억원 편성 (EBS-2TV 신규 제작비율: '15년 2.17%→'16년 4.8%)
- (신유형 서비스 활성화) VOD, OTT 등 방송·통신 융합 현상을 반영하여 방송 개념 재정립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, 전문가가 참여하는 '방송·통신융합 규제체계 정비방안 연구반' 구성·운영('16.5월~)

### □ 향후 계획

-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 사업 허가 : '16. 10월
- MMS 관련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: '16. 11월
- 신유형 미디어서비스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 : '16. 12월

### 3. 개인정보 활용 IT 서비스 활성화

#### □ 개요

-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신규 융·복합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국가 간 공조 확대

#### □ 추진 실적

- (개인정보 이용촉진)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고,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이용하려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조치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
-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개인정보 관련 법령\* 통합 해설서」 및 「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」 마련 ('16.7월)

\* 정보통신망법(방통위)·개인정보보호법(행자부)·신용정보보호법(금융위)

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규제를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법체계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

- (가이드라인 마련) 디지털 사이니지 및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 유망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

- (국가 간 공조 확대) EU 적정성 평가\*, APEC CBPR\*\* 가입 등 준비를 위해 외교부·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회 구성·운영

\* EU 적정성 평가('16.3월~), \*\* APEC CBPR ('16.7월~, APEC이 회원국 간 개인정보의 활발하고 안전한 유통을 위해 개발한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)

#### □ 향후 계획

- 정보통신망법 개정(안) 입법예고 : '16. 9월
- 분야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: '16. 12월
- APEC CBPR 가입 신청서 제출 : '16. 12월

## 4. 위치정보 산업 및 이용 활성화

### □ 개요

- 모바일 인터넷 산업을 선도할 성장동력으로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 스타트업 발굴 및 규제 개선 등 추진

### □ 추진 실적

- (스타트업 활성화) 차세대 위치정보 비즈니스 모델 발굴 관련 공모전 진행을 위한 아이디어 접수
  -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관련 법·제도, 기술, 경영 등 전문 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수행
- (규제개선을 통한 부담 해소) 사물인터넷 등 ICT 신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법체계의 정합성 제고
  - (진입규제 합리화)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, 소규모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신고간주제 도입
  - (법체계 정합성 제고) 정보통신망법과 유사하게 국외이전 규정, 징벌적 · 법정 손해배상제도, 시정조치 규정, 과징금 규정 등 신설
- (공익목적 활용 활성화) 긴급구조 상황시 긴급구조기관에 Wi-Fi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긴급구조 플랫폼 운영

### □ 향후 계획

- 위치정보법 개정(안) 입법예고: '16. 9월
- 우수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: '16. 12월

### III.

## 주요 현안 과제

### 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

#### □ 개 요

- 단말기유통법 성과점검('16.3월)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용자 혜택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

#### □ 주요 성과

- (이용자 차별 해소) 투명한 공시를 통해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었으며, 신규·기변에도 지원금이 동일하게 지급되어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  
※ 번호이동에서 기기변경으로 가입 비중이 확대 : '14년(1월~9월) 26.2% → '16.3월 47.7%
- (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)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이전 모델에 비해 낮아지고 있으며, 성능은 향상시키고 가격은 내린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 
※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 : '13년 16.2% → '14년(7~9월) 21.5% → '16년(1월~7월) 36.3%
- (투명성 제고) 이통사·유통점의 지원금 공시·게시를 통해 과거의 롤러코스터식 시장혼란이 사라지고, 판매점의 사전승낙제를 통해 과거의 이용자 현혹·기만·먹튀 등 불법행위가 감소
- (합리적 통신소비 정착)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·부가서비스 가입유도 행위가 금지되고, 20% 요금할인 활성화 등에 따라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 감소  
※ 1인당데이터사용량 증기에도 가계통신비 감소 : '14년 150,350원 → '16년 상반기 145,847원
- (시장 안정화) 단말기 지원금 차별·과다 지급, 유통점의 저가 요금제 가입 거부 등 다양한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조사·제재를 통해 위법행위 감소

## □ '16년 추진 내용

- 중소유통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상생방안 마련('16.5월), 이동전화가입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한 신분증스캐너 도입('16.9월), 지원금공시 및 게시방법(고시) 개정\*('16.9월)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

\* 20% 요금할인 활성화를 위하여 이통사·유통점에서 지원금 뿐만 아니라 20% 요금할인의 혜택사항(총 할인규모 등)을 함께 공시·게시하도록 고시 개정

-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

※ 유통점의 온라인 SNS 등을 통한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제재(3월)

※ LGU+ 및 관련 유통점 법인영업(B2B)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제재(9월)

## □ 의원입법안 발의 현황 (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, '16. 9. 20 기준)

대표 발의	주요내용
심재철 의원 ('16.7.12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지원금 상한제 폐지</li><li>○ 대리점·판매점의 지원금 15% 제한 폐지</li><li>○ 공시 7일전까지 방통위에 공시내용 관련 정보 신고</li></ul>
변재일 의원 ('16.7.28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</li><li>○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</li></ul>
신경민 의원 ('16.8.18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지급 제한</li><li>○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</li><li>○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</li><li>○ 지원금 상한제 유효기간 6개월 단축</li></ul>
신용현 의원 ('16.9.2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</li><li>○ 요금할인 등 혜택기준 상향입법 및 기준 요금할인율 범위 확대</li></ul>

## □ 향후계획

- 제도개선 및 위법행위 모니터링·시정조치 : 연중

## ② UHD 방송서비스 도입

### □ 개요

- 시청자에게 고화질 영상 콘텐츠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추진

### □ 주요내용

- (도입 일정) '17.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하고 '17.12월 광역시권 및 평창·강릉 일원으로 확대
  - 시·군은 '20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'21년까지 전국방송 완료
- (표준) 미국(ATSC 3.0)방식으로 지상파 UHD 국가표준(안) 발표('16.7월)
- (허가) 투자계획 및 편성계획, 시청자 지원계획 등을 중점 심사
  - UHD 투자계획 이행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하고 이행실적 점검
- (채널운용·편성방안) UHD 채널과 기존 HD채널을 동시 편성하며, 도입 첫해('17년)는 최소 편성비율 5%를 권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
- (추진체계) 지상파 UHD 추진위원회\*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('16.7월)
  - UHD 활성화, 시청자 지원, 채널운용 등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

\* 방통위·미래부 차관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지상파방송사, 가전사, 연구기관, 학계,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(총 14인의 위원으로 구성)

### □ 향후계획

-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사업자 신규허가 : '16. 10월 말

### **[3] 임시조치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**

#### **□ 개 요**

-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면서도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의 임시 조치 및 명예훼손분쟁조정 관련 제도를 개선 ('16.6월, 정부입법안 국회제출)

#### **□ 주요 내용**

- (표현의 자유 증진)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\* 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게시글 삭제 권한을 폐지  
\* 게시글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 
※ 삭제요청(권리주장자) → 임시조치(사업자) → 이의제기 신설(정보게재자)
- (사업자 자율조치 유도)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은 없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임시조치한 경우 배상책임을 감면
- (분쟁조정 기능 강화) 임시조치 관련 이의제기 시 직권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립적·전문적 「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」 \*를 방심위에 설치 · 운영

\* 방통위원장이 임명·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, 방심위 사무국이 운영 지원

※ 삭제요청(권리주장자)→임시조치(사업자)→이의제기(정보게재자)→직권조정(분쟁조정위)

#### **□ 향후 계획**

-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과 권리침해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의 조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노력

## IV.

## 참고 자료

### ① 2016년 입법계획

#### □ 국회 제출 법안

연번	법률명	주요 내용	추진일정
1	방송법 (일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법과 IPTV법 통합 (IPTV법은 폐지)</li> <li>○ 유료방송(SO·위성·IPTV) 사업자간 '동일서비스 동일규제'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회 제출 : '16. 6. 17.</li> <li>○ 시행일 : 공포 후 12개월</li> </ul>
2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일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의의제기 절차 신설</li> <li>○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 임시조치에 대한 책임 감면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회 제출 : '16. 6. 29.</li> <li>○ 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</li> </ul>

#### □ 제출 예정 법안

연번	법률명	주요 내용	추진일정
1	방송법 (일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상파다채널방송(MMS)의 법적 지위 및 승인근거 마련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회 제출 : '16. 11월</li> <li>○ 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</li> </ul>
2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일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신설 및 국외 이전 제도보완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회 제출 : '16. 11월</li> <li>○ 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</li> </ul>
3	전기통신사업법 (일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피조사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방안을 제안하고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건을 종결 하는 동의의결 제도 도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회 제출 : '16. 11월</li> <li>○ 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</li> </ul>

## ②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 개요

### 1. '16년도 세입예산 및 기금 수입계획

◇ ('15년) 12,012억원 → ('16년) 11,778억원 ('15년 대비 △234억원, △1.9%)

□ (일반회계) '16년도 563억원, '15년 대비 24억원 (+4.5%) 증가

- 단말기 유통법 시행과 통신시장 변화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증가 (530억원→559억원, +29억원)
- 전년도 사업비 정산잔액 및 이자 반납금 감소 (9억원→4억원, △5억원)

□ (방통기금) '16년 1조 1,215억원, '15년 대비 258억원 (△2.2%) 감소

- 방송사 법정분담금, 주파수 할당대가 등 자체수입 감소 (△44억원) 및 여유자금 회수 감소 (△577억원) 예상
- 공자기금 원금 회수 등 정부내부수입 증가 (+363억원) 예상

※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통위, 미래부 공동관리

< '16년도 세입 및 수입 현황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'15년 (A)	'16년 (B)	증 감	
			B-A	%
합 계	12,012	11,778	△234	△1.9
□ 일반회계	539	563	24	4.5
○ 벌금, 몰수금 및 과태료	530	559	29	5.5
○ 기타경상이전수입(정산잔액, 이자반납 등)	9	4	△5	△55.6
□ 방송통신발전기금	11,473	11,215	△258	△2.2
○ 자체수입(방송사 분담금, 주파수 할당대가 등)	7,821	7,777	△44	△0.6
○ 정부내부수입(공자기금 회수 등)	1,085	1,448	363	33.5
○ 여유자금 회수(전년도 결산 이월금)	2,567	1,990	△577	△22.5

## 2. '16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지출계획

◇ ('15년) 2,204억원 → ('16년) 2,273억원 ('15년 대비 +69억원, +3.1%)

□ (재원) 예산 556억원 ('15년 동), 기금 1,717억원 ('15년 대비 +69억원)

□ (분야) 통신 595억원 ('15년 대비 +13억원), 방송 1,678억원 ('15년 대비 +56억원)

□ (기능) 인건비 167억원, 기본경비 42억원, 사업비 2,064억원

### < '16년도 세출 및 지출 현황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'15년 (A)	'16년 (B)	증 감	
			B-A	%
<b>합 계</b>	<b>2,204</b>	<b>2,273</b>	<b>69</b>	<b>3.1</b>
□ 일반회계	556	556	-	-
□ 방송통신발전기금 (기금 총계=사업비+내부지출+보전지출)	1,648 (11,473)	1,717 (11,215)	69 (△258)	4.2 (△2.2)
o 사업비	7,857	7,686	△171	△2.2
- 방송통신위원회	1,648	1,717	69	4.2
- 미래창조과학부	6,209	5,969	△240	△3.9
o 정부내부지출(공자기금예탁)	1,800	2,000	200	11.1
o 보전지출(여유자금 운영 등)	1,816	1,529	△287	△15.8
□ 통 신	582	595	13	2.2
□ 방 송	1,622	1,678	56	3.5
□ 인건비	155	167	12	7.7
□ 기본경비	41	42	1	2.4
□ 사업비	2,008	2,064	56	2.8
o 방송인프라 지원 및 미디어다양성 증진	1,028	1,080	52	5.1
o 공정경쟁 및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	240	234	△6	△2.5
o 방송기반 구축 및 시청자권익 증진	690	701	11	1.6
o 방송통신 운영지원	50	49	△1	△2.0